

제2017-2호 (통권 19권)

NEWS LETTER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소식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SLETTER

CONTENTS

권두언	05
19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19대 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연구보고서	06
양극화를 초래하는 세 가지 힘의 불균형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08
4차 산업혁명의 사회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남기고 싶은 이야기	09
회장직을 회고하면서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정책토론회	11
“공교육 다양성 필요”에 자사고 폐지파 2명, 유지로 돌아서	
“전력수급 따져 천천히” ... 탈원전 찬반 7:2서 4:5로 역전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안보가 백척간두” 토론 뒤 병역 대체복무 찬반 5:4 → 4:5	
학회동정	22
협의회 행사	23
협의회 임원진	24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사업목적

- 한국사회에 적실한 연구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우수 연구 집단 육성을 통하여 사회과학 연구의 공공성 증진 및 학문적 자생력 강화
- 국가·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연구지원으로 사회과학 연구의 적실성 제고
- 국내외 사회과학분야 연구 동향정보 제공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19대 한국사회과학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 19대 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세월이 쏠살같이 흘러 제 19대 사과협 회장을 맡은지 2년이 지나 20대로 넘겨줄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 두해를 돌이켜 보며, 과연 협의회를 제대로 이끌어왔는지 자성을 해보며 자기평가를 해볼 기회를 가져 본다.

부회장 및 회장을 역임하면서 누차 글과 말을 통해 사과협의 위상/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해왔다. 나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분명 아니지만 회장으로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책임감도 막중했다. 근래 많은 학문분야는 세분화되는 정도 및 속도가 매우 빨랐다. 사회적 현상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은 그 규모가 더 더욱 급속적이었다. 이러한 학문 세분화의 현실 속에서 학회 중의 학회인 협의회로는 우선 본 학회가 일반 학회와 다른 상위의 학회로서 타 학회의 생각과 활동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했고 또 유행처럼 번지는 학문융합 및 통섭의 의무까지 가지며 변화에 앞서가려 노력을 하였다.

우선 타 학회에서 진행하였던 일반적인 논문발표, 학술대회를 지양하여 협의회로서 통합적 학술토론회를 지향하였다. 한준 연구위원장의 노력으로 SBS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인구변동과 미

래의 한국”, 2017년에는 “포용적 성장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한 연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SBS의 매체를 통해 전국에 확산시키고, 관련된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여러 번의 세미나와 정기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박진 대외협력위원장의 주도하에 사회과학 각 분야의 교수 10명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매월 개최하고, 그 내용을 중앙일보 지면에 전면 크기로 ‘이슈배틀’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기존의 토론회와는 달리,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타협점도 도출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상기 두 프로젝트를 통하여 협의회가 상위학회로서 학문의 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는 사회적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협의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과학협의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재정립하기 위해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한국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숙고”라는 토픽으로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개최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심포지움과 한국심리학회와 공동 개최한 “한국사회의 내일을 묻는다: 신뢰와 행복의 관계”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은 각각 한국 사회의 시대적 현안들을 놓고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또 대외적으로 세계 및 아시아 사회과학협의회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으며, 특히 일본 아즈미 財團과 협조하여 Asia Future Forum에 참가하고 내년에 세계대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 19대 회장으로서 협의회는 정체성/위상을 나름 수립, 실현하려고 처음 천명했던 철학을 펼쳐보려 노력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 아쉽다. 미진한 부분은 차기 박찬욱 회장께서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시리라 믿는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세가지 힘의 불균형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지기는 했지만 소득분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일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최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까? 핵심 원인은 시장의 승자가 우월한 힘을 이용해 격차를 더 벌리기 때문이다. 축구경기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그 팀 선수 한명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대기업일수록 이익률이 높고, 기업에 비해 힘이 약한 노동에 대한 배분율은 낮아진다. 또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의 수익률도 높아진다. 정부와 공동체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재분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 세 가지 힘의 불균형을 하나씩 알아보자.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이다. 2000년 이후 중국이 부상하고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늘 중소

기업에 비해 높게 유지되어 왔다. 물론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은 탓도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도 중요한 요인이다. 대기업이 무리한 단가인하 요구로 중소기업을 압박하거나, 중소기업에 갈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메워 주어야 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요구한다든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든지, 또는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아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더 폭 넓게 담합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에게 흐르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힘의 불균형은 기업과 노동자 간에 나타난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비중은 점진적 하락 추세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해외직접 투자를 늘린 것이 주요인이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1년 이후 빠르게 늘었다. 이렇게 노동에 대

* 본 협의회는 2017년 SBS문화재단이 발주한 국가미래의제연구를 수주하였고, 한준(연세대 사회학),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 방정식'을 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원고는 연구 결과의 일부를 간추린 것입니다. 전체 결과는 2017년 11월 24일 개최된 본 협의회 주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한 배분이 감소하는 것은 유명한 피케티의 주장이기도 하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를 많이 쓰게 되니, 노동배분율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에게 보호막이 있는데 바로 노조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노조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불투명한 회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은 비상장이 대부분이고 외부회계 감사도 받지 않아 대기업보다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법인세 소득탈루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중 우리가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항목이 있다. 바로 '회계감사의 적절성'이다.

결국 중소기업 노동자가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 대기업의 압박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동시에 노조의 보호 없이 불투명한 회계의 피해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대부분인 88%이다. 이들의 어려움이 근로소득 양극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 간 힘의 불균형은 건전한 노조활동으로 메울 수 있다. 우리의 노조가입률은 10%로서 OECD국가 평균인 28%에 크게 못 미친다. 유럽에선 노조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산업별 노조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와 못 받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힘의 불균형도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의 불평등이 핵심이다. 부동산 불평등은 2000년 초반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서 두드러지면서 시작되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강남권의 25평 아파트 가격은 1988년 근로자 평균 월급의 198배였는데 이젠 470배가 되었다. 이러한 자산의 양극화는 자영업의 양극화로도 연결된다. 자영업 양극화는 수요가 고급화되며 나타

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조기퇴직으로 생계형 자영업이 늘어난 탓도 크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나 임대사업자의 소위 갑질은 자영업자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 지켜볼 일이다. 자산형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매기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매우 낮은 편이다. 자산 관련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고용창출 부진도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촉진, 규제 완화 등 지금까지 해 오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연공서열에 의한 호봉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호봉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수준이어서 일정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임금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간다. 따라서 기업은 사람을 가급적 덜 쓰거나 비정규직으로 뽑으려 한다. 정규직으로 뽑아도 임금이 너무 오르기 전에 내보내고 싶어 한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작년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남성은 51.6세, 여성은 47세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양극화는 세 가지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 자산가와 무자산가 간의 불균형이 그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불균형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불균형을 메우는 데에 정부와 시민공동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기술발달에 대한 논의들이 난무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서 시작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유전자가위, 스마트 팩토리,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기술발달을 통틀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 아마도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인 것 같다. 2016년 10월 클라우드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이 내한하여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 충격을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전도'하면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최근에는 연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을 내건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것 같다.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한국이 유독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열광하는 것을 보면, 그 담론 안에 우리의 DNA에 맞는 무언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단순한 수사적 슬로건이 아닌 사회과학의 개념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논란거리이다. 그 변화가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것인지, 그 이전의 1-2-3차 산업혁명과는 얼마나 다른지, 3차 산업혁명론의 흥분이 가시기도 않았는데 벌써 4차를 논할 정도인지, 더 나아가 왜 작금의 변

화를 기술혁명이나 생산혁명, 정보혁명, 커뮤니케이션 혁명 등이 아니고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토록 유행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산업혁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의 기술발달을 해석하고 싶은 우리의 속내가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리 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 자체가 사회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공학적 현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회과학적 현상이다. 주로 기술과 사람의 대결을 논하지만 사실은 기술을 내세워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가 다투는 사회적 이익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술, 정보, 지식 등과 같은 변수들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부상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행위자들이 새로이 부상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성 행위자들은 도태되며, 그 결과로 권력구조와 사회질서가 재편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경쟁의 양식 자체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창출하는 신흥 선도부문에서는 단순히 값싼 제품과 더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놓고 벌이는 좀 더 복합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경쟁의 양식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데 있어서 정책과 제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정책과 제도로는 안 된다. 최근 부쩍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게임에서의 성공여부는 기술공학적 차원에서 본 혁신만큼이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적절하게 응용하며, 더 나아가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시스템과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진지하고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 오면 4차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회과학의 논제가 된다.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사회과학적 탐구가 필요하다.

회장직을 회고하면서 *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필자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협의회 설립 (1976년 설립) 초창기 때부터이다. 초창기의 사회과학협의회의 위상과 존재가치는 모든 사회과학도들의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회장인 고병익 교수를 위시해서 당시의 권위 있는 학자 및 교수들이 거의 전부 이 협의회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구위원회(당시 위원장은 임희섭 교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열과 성을 다 해서 참여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5~6명의 연구위원들이 너 나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다.

세월이 흘러서 협의회 편집위원장(1983-1985년)을 맡게 되었고 1994년에는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회장직을 맡고 보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앞서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다. 우선 협의회를 이끌어 갈 자금마련이 걱정거리였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

선 삼성그룹 비서실에 접근하였다. 비서실에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존재이유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더니 우리가 기대했던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원해 주었다. 우리는 3000만 원 정도를 기대했는데 당시 돈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다. 그 당시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삼성그룹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지니고 있다. 이어서 당시 부회장이었던 신유근 교수(서울대 경영학과)가 금호그룹에 접촉하여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7000만원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보니 이제는 어떤 연구 활동을 해야 하느냐가 큰 관심거리였다. 필자는 회장이었지만 매년 연구위원회(위원장장은 장달중 교수)에 참여하여 연구주제의 선정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진지한 연구토론 끝에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하나는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요 또 하나는 [문화와 국가경쟁력]이었다.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지구촌은 어디를 막론하고 국제화 또는 세계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도 1980년대부터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제화가 절박성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체결과 더불어 서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다가온 국제화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당혹감이 가시기도 전에 세계화라는 개념이 다시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를 더욱더 혼란과 당혹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문제를 앞에 두고 사회과학협의회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절박성에서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 개념의 분별과 정리가 필요하여 이 연구주제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문화와 국가경쟁력]은 첫 번째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21세기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의 사회라고 할

* 2016-1호부터 협의회 초창기에 참여한 원로 회원들의 원고를 받아서 뉴스레터에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들은 장차 본 협의회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 있다. 모든 국가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선진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개발은 물론 현재의 삶의 양식 변화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삶과 의식의 변화에는 특정의 부분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요구되고 심지어 놀이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문별 집필자를 선택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이 편집위원회의 역할이었다. 필자는 매번의 편집위원회(위원장은 양종회 교수)에도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물이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총서 (II)와 (III)으로 박영사에서 출판되었다. 훗날에 이 책들은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5년에 인도 델리에서 세계사회과학연구협의회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아세안 지역의 30여 개국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었다. 러시아, 중국, 호주 등 의 나라들도 참석하였다. 북한 대표로도 두 사람이 참석하였다. 그때 필자는 한국인으로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모든 나라들의 대표들이 한국을 찬양하고 치켜세우는 것이었다. 특히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대표는 한국기업들이 자기네 나라를 살려주고 있다고 감격적인 찬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필자가 1960년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은 험벗고 가난한 나라의 대표 격이었다.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던 우리 한국이 세계가 기리고 찬양하는 국가가 되었다니 믿겨지지 않았다. 협의회 총회 때 인도 수상이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였다. 인도에서는 사회과학협의회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총리가 총회에 참석해서 축하를 하게 된 것이다. 인도 총리는 미국 MIT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경제학자 출신이었다. 그는 나라별로 설명하면서 한국의 차례가 오자 기적을 이룩한 나라로 극찬을 하면서 앞으로도 전도가 유망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의 순서가 오자 그냥 이름만 거명하고 지나가 버렸다. 옆에 있던 일본 대표

에게 인도 총리가 너무 한국을 과찬해서 민망스럽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일본 대표는 인도 총리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필자를 격려해주었다. 그 당시 일본 대표는 일본에서 제일가는 헌법학자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총회에 이어서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각국 대표들이 자기 나라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북한 대표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설명하자 옆에 앉아 있던 중국 대표(북경대학 철학과 교수)가 필자에게 '개 짖는 소리'를 한다고 혹평한 것이 기억에 새롭다. 그 당시 북한 대표는 안쓰러울 정도로 완전히 왕따 신세였다. 거기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이중의 생활이 불쌍할 정도였다. 즉 혼자 와서 이야기할 때와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다. 혼자 올 때에는 한국사회가가 부럽다고 호소하더니 돌아 올 때에는 미국의 주구 노릇한다고 질타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저렇게 속 다르고 걸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자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필자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의 앞으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내달리고 있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만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분야의 개별 학문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융합하여야만 해답을 찾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과학협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더욱 막중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과학협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의 사회문제들을 풀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정책 토론회

본 협의회는 금년 2월부터 안민정책포럼,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국가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10명의 사회과학분야의 교수들이 '판정단'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고, 이 내용은 중앙일보 지면에 '2017 이슈배틀'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기사 내 간을 여기에 전제합니다. 이 토론회는 사회과학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집단을 육성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SK(한국사회과학연구) 연구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SSK-네트워킹지원사업단의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책 토론회 1

“공교육 다양성 필요”에 자사고 폐지파 2명, 유지로 돌아서

리셋 코리아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중앙일보

2017 이슈 배틀

5 외교·자사고 폐지해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싣고 있다. 가장 첨예한 이슈를 골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토론 현장을 배틀 형식으로 생중계한다. 다섯 번째 주제는 ‘외교·자사고 폐지’다.

이슈 배틀
10인의 판정단
※사회자는 투표 불함



송해덕(사회자)
중앙대 교육학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세건
강원대 인류학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신인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신호정
고려대 경영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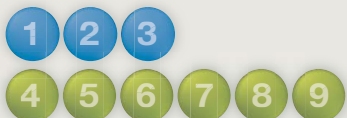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

외교·자사고 폐지 논란 판정단 9인의 생각 변화는

● 외교·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 현행 유지

1R

사전투표
3:6



“정권에 따라 교육 바꾸나”

9명 중 6명 현행 유지 선택

1 Round

◆사전투표=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경기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10곳을 2020년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와 자사고는 5년마다

사·도 교육청의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다. 같은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 수렴이라든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구체적 액션이 없으니 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찬반 논란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7월 14일 ‘2017 이슈 배틀’ 다섯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인 ‘외교·자사고 폐지’를 놓고 사전투표를 한 결과 판정단 6명이 ‘현행 유지’를 택했다. 한 판정단은 “개혁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시스템은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고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상위권 독식” 폐지 찬성 5명으로 역전

2 Round ◆전문가 의견 청취=폐지 찬성 측인 송인수 사교
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한국 고입 전형은 세
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단계 불공정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영재
고가 가장 먼저 중3 학생을 뽑고 자사고와 특목고에서 골라간 뒤
자율고·특성화고·과학중점고를 거쳐 남은 학생이 일반고로 배정되
는 것이 현재 고입 전형이다. 대학 입시를 고입처럼 서울대가 먼저
뽑고 그다음 연·고대, 탈락하면 수도권, 지방대 순으로 보낸다면
납득할수 있겠나? 국민의 52.5%(리얼미터)가 일반고 전환에 찬성
하는 건 이런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다.”

오세목 중등고등학교 교장(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도 밀리지 않았
다. 오 교장은“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오해”라고
지적했다. “서울 내 광역단위 자사고는 1단계에서 내신성적에 관
계없이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인성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성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 자사
고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선발고사로 신입생을

뽑던 과거 사례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송 대표가 다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추첨·면접 전형을 하는데 자
사고 1학년 중 77.8%가 중학교 성적 상위 50% 내에 속하고, 20%
안에 들어가는 비율도 무려 38.6%”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가 24만1000원,
중학교가 27만5000원, 고등학교가 26만2000원이다. 외고·자사고
가 좋은 대학 진학과 좋은 직장 취업에 유리한 경로라는 인식이 뿌
리를 내리면서 중학교가 사교육의 중심 구간이 된 것이다. 학교 체
제는 단순화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도입해 교육의 다양성을 도모
하는 게 정답이다.” 이에 대해 오 교장은 “월 46만원(자사고 평균)
이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부자만 다니는 특권 학교인 것처럼 매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학비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학생은 정원의 20%에 달하는 사회통
합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장학금도 지원한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학부모와 학교 법인이
부담한다. 그 대가로 얻어낸 자율성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하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왔다. 자사고가 마치 일반고를 황폐화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두 번째 투표에선 두 명의 판정단이 생각을
바꿨다. 현행 유지를 택했던 판정단④는 “극소수인 외고, 자사고
출신이 상위권 대학을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했다”며 판정
단⑤는 “특목고로서의 외고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말이 인
상적이었다”며 폐지 입장으로 돌아섰다.

“특목고 체제는 중3 아이들 억압하는 것” “강제적 평등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못해”

3 Round ◆집중토론=전문가 의견 청취 후 우위를 점하게
된 폐지 주장 측이 선공에 나섰다.

“현실적으로 외고·자사고 출신 학생이 좋은 대학을 거쳐 흔히 말해
좋은 직장이라는 대기업과 법조계로 간다. 부모 입장에서 외고·자
사고에 보낼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일부 특권층에선 영어유치원·
사립초·국제중 코스를 밟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선발 절차가 불공
정하니 동시 선발을 하자는데 자사고가 못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특권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판정단②〉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평준화 논쟁이 치열했다. 자사고도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은 평준화 논쟁이 사라졌다. 외고나 자사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평준화를 원치 않는 일부 계층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4.8%(외고·자사고 등 비일반고 정원 비중)가 나머지 95%의 사고를 바꾸고 있다. 사회 전체가 과잉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판정단③〉

현행 유지 측에선 ‘대학 입시 과열의 책임을 일부 특목고에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입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실적인 요구가 있고, 대학도 사실상 서열화돼 있는데 거기에 충실했다고 일부 고교의 잘못된 양 몰아붙여선 안 된다. 전부 일반고가 되면 입시 경쟁이 사라지나? 외고도 마찬가지다. 외고를 진학했는데 외국어계로 진학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경쟁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걸 부정할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진짜 목표다.”〈판정단⑥〉

“다들 핀란드 교육을 본받자고 하는데 실제로 훌륭하다. 학생이 재즈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재즈 선생님을 붙여주고, 타악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목공 전문가를 붙여준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교육 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하드웨어와 인적자원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왜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학교들을 탓하나?”〈판정단⑧〉

그러자 판정단④는 “경쟁에서 도태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가르쳤고, 그 바람에 서울대에 못 갔다고 재수·삼수하는 나라가 됐다”며 “한창 꿈꾸고 자신을 탐색할 시기인 중3 아이들을 어른의 방식으로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정단⑨는 ‘오히려 자사고가 자율성을 더 키워서 미래에 대비하도록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젠 이상한 애, 특이한 애를 배출하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정시 비중이 줄면서 이미 많은 자사고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일반고에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다. 자사고마저 없으면 일반고는 변해야 할 최소한의 유인마져 얻지 못한다.”

이 밖에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강제적 평등으로 돌아가면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일반고 전환에 따라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와 같은 주장이 나왔다. 외고는 ‘영어를 제외하고 제2외국어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판정단⑤는 다시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판정단①도 판정단⑤와 함께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결과가 사전투표와 같아졌다. 두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 건 판정단⑦의 이 한마디였다.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던 그 마음과 열기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점점 열어지고 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대학의 가치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외과 수술(폐지)보다는 공교육 다양성 확보라는 원래 취지를 살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한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따라 교육 철학이 바뀌는 것 아닌가?”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첨예한 이슈 ‘삼세판 토론’… 합의점 찾기 실험

“이슈 배틀” 어떻게 진행하나

‘2017 이슈 배틀’은 배틀 형식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 가되 합의도 모색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소속 대학과 전공·연령대가 다양한 10명의 교수로 판정단을 구성한다. 판정단에선 해당 이슈 전공자를 일부러 배제한다. 전문가는 각자의 소신이 확고해 토론을 해도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과 지적 능력을 갖춘 비전공자가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토론은 3라운드로 이뤄진다. 1라운드는 평소 판정단의 생각을 드러낸다. 2라운드에선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판정단이 다시 투표한다. 3라운드에선 판정단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 라운드마다 입장을 바꾼 판정단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힌다. 솔직한 입장 표명을 유도하기 위해 판정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2017 이슈 배틀’은 중앙일보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SSK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정책 토론회 2

“전력수급 따져 천천히”... 탈원전 찬반 7:2서 4:5로 역전

리셋 코리아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중앙일보

2017 이슈 배틀

6 탈원전, 맞는 길인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실행 중이다. 가장 첨예한 이슈를 골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토론 현장을 배틀 형식으로 생중계한다. 여섯 번째 주제는 ‘탈(脫)원전’이다.

이슈 배틀
10인의 판정단
※사회자는 투표 분장



“시점 문제일 뿐 방향 맞다”

9명 중 7명 탈원전 정책 지지

1 Round

◆사전투표=“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빠르게 ‘탈(脫)원전’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 있던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그 신호탄이다. 현재 건설의 계속·중단 여부를 가릴 공론조사가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일부는 ‘성급한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선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전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8월 11일 ‘2017 이슈 배틀’ 여섯 번째 토론이 열렸다. 이날 주제인 ‘탈원전’을 놓고 사전투표를 했다. 정부는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설계 수명이 다하는 2079년을 구체적인 탈원전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판정단 7명이 ‘찬성’을 택했다. 토론

‘2079년 탈원전’ 판정단 9인의 생각 변화는

※사진 순서와 번호는 관련 없음

탈원전 찬성

탈원전 반대

1R

사전투표

7:2



2R

전문가 의견
청취 후

5:4



판정단⑥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불안하다면 안전 기준을 높이면 될 일인데 원전의 경제성이나 현재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절대적 역할(발전량 기준 약 30%)을 모두 덮어두고 선택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너무 정치적인 접근이다”

판정단⑦ 생각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경제성도 문제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급격히 늘리는 건 반드시 부작용을 야기한다”

초반엔 ‘시점의 문제일 뿐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원전 안전성 우려 너무 과장” 찬성 2명 반대로 돌아서

2 Round

◆전문가 의견 청취=찬성 측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고 확률이 수억 분의 1이지만

상업적 원전 가동이 시작된 1956년 이후 벌써 여섯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안겼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24기의 원전이 있고, 대부분이 울진 등 경상도 해안가 지역에 밀집돼 있다. 이 주변 인구가 최소 340만 명이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한국은 안전하다’는 명제 자체가 틀렸다.”

정도영 동신대 에너지융합대 교수가 “과도한 공포를 조장해선 안 된다”며 반박에 나섰다. “세상에 100% 안전한 기술이란 없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고 차를 없애진 않는다. 불안하다면 안전 기준을 높이면 될 일인데 현재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절대적 역할(발전량 기준 약 30%)을 덮어 두고 선악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자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도 제대로 짚자”고 말했다. “발전 단가가 싸지만 이는 폐로 비용이나 사용 후 처리 비용 등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금융 비용이 싸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에 비해 보험료도 적게 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계산을 소위 원전 전문가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사람과 제도의 문제라면 그것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적안이라는 건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가장 덜 나쁜 것이다. 에너지 믹스는 각 에너지원의 발전비용과 부작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을 고르는 일이다. 이런 계산에 따라 원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비중은 줄게 돼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원전이 되는 거다. 향후에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너무 성급하다.”

윤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태양광만 해도 발전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석유는 50년대 말, 천

연가스는 70년대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도 지금은 비중이 1.2% 정도지만 정책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주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전력을 생산할 때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경제성도 문제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두 명의 판정단이 생각을 바꿨다. 탈원전에 찬성했던 판정단⑥과 판정단⑦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원전, 당장 효율적이라도 안전한 미래 생각을” “신재생에너지론 산업용 전기까지 공급 못해”

3 Round

◆집중토론=반대측이 선공에 나섰다. 판정단⑧은 “현재 탈원전 논의의 핵심은 현재 기술(원전)

과 미래 기술(재생에너지) 간의 갈등”이라며 “미래 기술의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면 현재 기술의 중단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은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산과 빙하가 있는 노르웨이는 수력만으로 충분하다.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한 풍력단지에는 발전기만 3000개가 있다. 한국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일조량도 많지 않다. 전기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려면 재생에너지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먼저다.” <판정단⑨>

이에 대해 판정단①은 “탈원전은 미래 세대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 주기 위해 지금 선택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주마다 에너지 정책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건 자연환경 때문만이 아니다. 주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산업도 육성하기 때문이다. 당장 원전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변하지 않으면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 있는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60년이 더 남은 이야기인데 준비가 덜 됐으니 천천히 가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은 결단해야 할 때다.” <판정단②>

반대 측 판정단⑦은 “안전이 그렇게 문제라면 2079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추는 게 맞고, 환경이 문제라면 원전보다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로 산업용 전기까지 조달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현재 한국은 산업용 전기 비중이 50% 이상이다. 원전 비중을 줄이면 공급 불안정이 불가피하다. 생산 일정, 수출 일정이 생과도 같은 기업 입장에서 오락가락하는 전력 공급은 최악의 조건이다. 현재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 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판정단⑥>

이에 대해 판정단③은 “30~40년간 지속된 원전 육성 정책 때문에 관련 업체나 전문가는 그야말로 독주를 해왔다”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선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군납비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한 선언 없이는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기업 중심, 산업 중심으로 끌어왔다. 성장 시대의 유산이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눈앞이다. 전력도 이제 소규모 자체 생산, 자체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 수요를 잡을 수만 있다면 재생에너지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판정단④>

논의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찬반을 떠나 다수의 판정단이 공감했다.

“지금처럼 싼값에 마음껏 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캘리포니아에 태양광 설비를 갖춘 집이 많은 건 기본적으로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저비용 에너지 정책을 고

집하면 재생에너지 시장이 클 수 없다. 그러니 업체도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목매다 도산하는 일이 반복된다.” <판정단①>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찬성을 택했던 판정단⑥가 입장을 바꾸면서 찬반 비율이 역전됐다. 그의 공감을 이끌어낸 건 판정단⑧의 한마디였다. “현 정부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어떤 측면에서 다음 정부에선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에너지는 한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원전 비중을 줄여가겠다고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다. 60년 뒤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더욱 천천히 가는 게 맞다.”

토론이 끝난 뒤 주제와 별도로 현재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찬반 의견도 물었다. 8명은 ‘재개’, 1명은 ‘중단’을 택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첨예한 이슈 ‘삼세판 토론’… 합의점 찾기 실험

“이슈 배틀” 어떻게 진행하나

‘2017 이슈 배틀’은 배틀 형식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 가되 합의도 모색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소속 대학과 전공·연령대가 다양한 10명의 교수로 판정단을 구성한다. 판정단에선 해당 이슈 전공자를 일부러 배제한다. 전문가는 각자의 소신이 확고해 토론을 해도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과 지적 능력을 갖춘 비전공자가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토론은 3라운드로 이뤄진다. 1라운드는 평소 판정단의 생각을 드러낸다. 2라운드에선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판정단이 다시 투표한다. 3라운드에선 판정단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 라운드마다 입장을 바꾼 판정단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힌다. 솔직한 입장 표명을 유도하기 위해 판정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2017 이슈 배틀’은 중앙일보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정책 토론회 3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리셋 코리아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중앙일보

2017 이슈 배틀

7 행정고시 폐지 옳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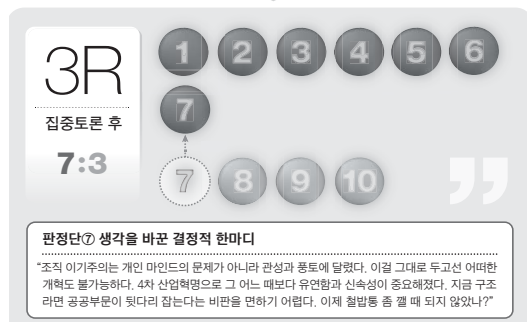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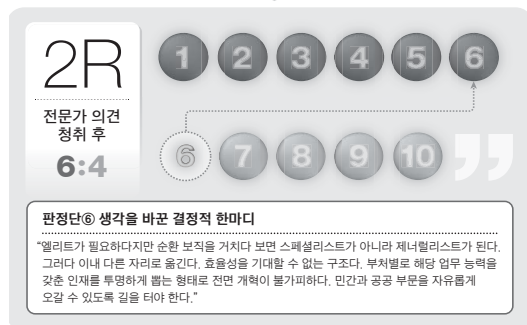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치는 까닭이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 배틀’ 시리즈를 실행 중이다. 가장 첨예한 이슈를 골라 ‘틀림’이 아닌 ‘다름’의 토론 현장을 배틀 형식으로 생중계한다. 일곱 번째 주제는 ‘행정고시 폐지’다.

이슈 배틀
11인의 판정단
※사회자는 투표 불참



'5급 공무원시험 폐지' 판정단 10인의 생각 변화는

※사진 순서와 번호는 관련 없음



인사혁신처장 “개선이 맞다”

판정단 10명 폐지 찬반 팽팽

1 Round

◆사전투표=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개혁성향의 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공무원 인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엔 5급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행정고시)을 없앤 뒤 7급 공채로 통합하고, 민간 경력 채용을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선을 앞둔 시점인데다 함께 열린 토론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수험생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자 민주당 측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후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이 내용은 빠졌다.

그러나 7월 12일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가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김 처장이 교수 시절 논문에서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일단 김 처장은 8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시 제도는 좋은 전통이고, 이는 개선해서 계속 가는 게 맞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당장은 아니라도 불씨는 살아 있다. 개선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폐지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충분하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0월 공직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인사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9월 8일 '2017 이슈 배틀' 일곱 번째 토론이 열렸다. 이날 주제인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폐지'를 놓고 사전투표를 했다. 판정단 5명이 '찬성'을, 5명이 '반대'를 택해 팽팽하게 출발했다.

“폐쇄적 공직제가 비효율 불러” 폐지 찬성으로 1명 돌아서 6:4

2 Round

◆전문가 의견 청취=찬성 측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선공에 나섰다. 그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비효율성이고, 그 출발점은 폐쇄적 공직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받고, 독립된 연금 체계의 보호를 받는다. 어지간한 비위나 직무 태만으로는 그 직을 위협받지 않고, 외부와의 경쟁도 없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직위의 수가 줄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들은 퇴출되어야 맞지만 공무원은 예외다. 순서의 문제일 뿐 돌아가며 승진한다. 상부는 5급 공채끼리의 경쟁이고, 조직 하부에선 만성적인 인사 적체에 따라 노력할 유인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대 측 오성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밀리지 않았다. 오 교수는 “현 공직시스템상 엘리트 공무원의 충원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이 9급으로 입직하면 평생 승진 가능한 목표점은 현실적으로 5급이나 4급이다. 7급도 큰 차이는 없다. 입직 후 이런 정책 결정의 중심 직위(4~5급)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참신함이 떨어지게 된다. 새로운 생각을 꺼리게 되고, 습관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게 된다. 실무 능력은 있겠지만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결국 후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따로 뽑아야 한다.”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이란 현 구도를 볼 때 폐지는 좀 이르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고시제도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을 뽑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엘리트가 필요하다지만 순환 보직을 거치다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된다. 그러니 사무관이나 서기관은 새로운 보직을 받아마자 전화기부터 들어야 한다. 곳곳에 물어봐야 해서다. 그러다 이내 다른 자리로 옮긴다. 이런 공무원에게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 부처별로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투명하

게 뽑는 형태로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 민간과 공공 부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그러자 오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자질을 측정해야 하고, 시험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사회가 성숙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수록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도 중심을 쥐고 정책을 추진할 조정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러려면 각 이해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갖춰야 한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이런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 개선은 필요하지만 부처가 인사까지 담당할 여력도 없거니와 비용을 생각하면 실용적이지도 않다.”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한 명의 판정단이 생각을 바꿨다. 5급 시험 폐지에 반대했던 판정단⑥이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그대로 두고 효율성을 논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고위직 독점 끊어야 ... 5·7급시험 합쳐 6급 뽑자” “민간 채용은 한계 ... 시험 빼곤 거를 방법 없다”

3 Round

◆집중토론=찬성측이 선공에 나섰다. 판정단①은 “각 분야에서 열린 사회로 나아가자는 요구가 있고,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일을 하다 보면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리를 자주 옮기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가리는 게 쉽지 않다. 문제는 그 오류나 실수를 함께 감춰 준다는 점이다.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직해도 공직 근처를 맴돈다. 안에 있는 후배는 선배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역시 자신의 미래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동료의식의 출발점은 기수 문화에 있다. 크게 흔드는 수밖에 없고 5급이든, 7급이든 채용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판정단②〉

이에 대해 판정단⑧은 “투명성을 높이는 건 중요한 과제지만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맞받았다.

“공모형 채용이 늘면서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일도 흔해졌다. 이렇게 공무원 채용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런데 전

부를 그렇게 뽑을 순 없다. 수천 명을 시험도 없이 어떻게 거를 건가? 개별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는 또 어떻게 확보하나? 다양화된 방식 중 하나로 공채시험은 꼭 필요하다. 부처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시기상조다.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이 불과 몇 년 전이다. 중앙에서 관리해야 그나마 부처별 유착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판정단⑨〉

판정단③은 “시험으로 5급을 뽑고, 그들이 실·국장을 한 뒤 장차관까지 맡는 나라는 드물다”며 폐쇄성을 재차 지적했다.

“우수한 엘리트 공무원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정책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는 분권의 시대다. 시험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고시가 고위직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걸 끊자는 의미다. 우선 5급을 폐지해 7급과 통합한 뒤 6급 정도로 뽑자. 국장급 고위직은 공공과 민간의 벽을 허물어 100% 공개채용하되 우수한 공무원과 민간의 전문가가 경쟁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5급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고위직으로 가는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다.”

그러자 판정단⑩은 “공무원 조직의 문제는 신입 선발 방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공시는 그나마 내가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공무원 시험은 하나의 채용 절차인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공직으로 입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계층사다리가 무너지는 와중에 5급 공채까지 폐지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에 대해 판정단④는 “출발선에 따라 이후의 인생이 사실상 결정되는 닫힌 사회를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은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기 위해 지금도 수만 명의 청년이 자신의 젊음을 허비한다. ‘공무원 시험=대박’이란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사실상 내몰리는 구조다. 합격하면 그때부터 미래가 정해진다. 7·9급으로 시작하면 서기관(4급), 5급으로 시작하면 국장급으로 퇴직하는 틀이 아예 고착화돼 있다. 이걸 흔들기 위해선 진입장벽을 없애는 게 필수적이다.”〈판정단⑤〉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찬성을 택했던 판정단⑦이 입장을 바꾸면서 결과는 찬성 7, 반대 3으로 바뀌었다. 판정단⑦의 공감을 끌어낸 건 판정단③의 이 한마디였다.

“조직 이기주의는 개인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과 풍토에 달렸다. 이걸 그대로 두고선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함과 신속성이 중요해졌다. 지금 구조로는 공공부문이 뒷다리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철밥통 좀 깎 때가 되지 않았나.”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첨예한 이슈 ‘삼세판 토론’… 합의점 찾기 실험

“이슈 배틀” 어떻게 진행하나

‘2017 이슈 배틀’은 배틀 형식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드러내 가되 합의도 모색하는 실험이다. 이를 위해 소속 대학과 전공·연령대가 다양한 10명의 교수로 판정단을 구성한다. 판정단에선 해당 이슈 전공자를 일부러 배제한다. 전문가는 각자의 소신이 확고해 토론을 해도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상식과 지적 능력을 갖춘 비전공자가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내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가는 과정을 추적한다. 토론은 3라운드로 이뤄진다. 1라운드는 평소 판정단의 생각을 드러낸다. 2라운드에선 찬반 양측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판정단이 다시 투표한다. 3라운드에선 판정단이 스스로 참여해 토론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 라운드마다 입장을 바꾼 판정단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밝힌다. 솔직한 입장 표명을 유도하기 위해 판정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2017 이슈 배틀’은 중앙일보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안민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이 주관한다.

정책 토론회 4

“안보가 백척간두” 토론 뒤 병역 대체복무 찬반 5:4→4:5

리셋 코리아 2017 이슈 배틀 8 병역 대체복무 옳은가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중앙일보

이슈 배틀
10인의 판정단
※사회자는 투표 불참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을 친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선 국가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중앙일보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하나로 ‘2017 이슈배틀’ 시리즈를 실행 중이다. 여덟 번째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다.

문 대통령 공약 병역 대체복무 허용 5, 불허 4 팽팽하게 출발

1 Round

◆ 사전투표=2007년 9월 국방부는 ‘사회복무제도’의 하나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형 없이 현역 복무 기간 두 배 동안 합숙하며 치매노인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할 길을 열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판정단 9인의 생각 변화는



잇혀졌던 이 키워드가 10년 만에 주목 받고 있다.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1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시 도입을 권고했다. 8월 11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904명이 청와대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10월 13일 ‘2017 이슈 배틀’ 여덟 번째 토론이 열렸다. 이날 주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를 놓고 사전투표를 했다. 판정단 5명이 ‘찬성’을, 4명이 ‘반대’를 택해 팽팽하게 출발했다.

“군 사기 저하” “여론도 찬성” 찬반 1명씩 반대편으로 이동

2 Round

◆ 전문가 의견 청취=반대 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양윤숙 변호사는 “양심과 국가 안보 간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건 현실을 도외시한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핵 실험에 우리 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역자원 이탈을 유발하고, 군 사기를 떨어뜨려 안보 위기를 점증시킬 우려가 있다.”

찬성 측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라고 맞섰다.

“중요한 건 내면에 머무는 양심의 실현여부를 그 사회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순 있어도 결코 그들에게 무기를 들고 할 방법은 없다. 소수의 국민이라도 양심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국가다.”

이에 양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맞받았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군 복무 이상으로 힘들다고 단언할 수 없다. 사고의 위험성, 고된 훈련, 엄격한 조직문화 등을 감안하면 대체 복무와는 비교가 안 된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트렌드, 법조계의 판단, 여론 모두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덴마크·대만 등 대부분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 올해만 해도 관련 소송에서 35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민도 68%가 대체복무 제도입을 찬성한다.”

전문가가 자리를 떴다. 허용이었던 판정단 ⑤는 “병역 기피의 도피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불허를 택했던 판정단 ⑨는 “연 500명 정도인 이들을 현역병에서 제외해도 병역자원 손실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며 허용으로 이동했다.

“장소·기간 설계 잘하면 현역 못잖은 대체복무 가능” “양심 진위 판별 어려워 상상 못한 편법 등장할 것”

3 Round

◆집중토론=불허 측 판정단 ⑥은 “특정 종교인이 가진 양심의 가치가 신성한 병역 의무보다 월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공에 나섰다.

“어떤 심사라도 양심의 진위를 가려낼 순 없다. ‘내 아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며 회피하는 부모가 있을 것이고, 한번 길을 열면 상상하지 못한 수법도 등장할 것이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판정단 ⑧〉

허용 측 판정단 ①은 “죽어도 총을 못 들겠다는 사람이 소대·중대에 있는 게 더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재해 복구나 의료·복지 영역에서의 대체복무가 군 복무보다 편하고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복무의 강도, 장소, 기간 설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현역 복무보다 힘들거나 그에 유사한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판정단 ②〉

이에 대해 판정단 ⑤는 “병역 의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의미인데 싸울 의지가 없는 이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받기도 하고,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 수단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위 선양이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뿐이다.”〈판정단 ⑦〉

그러자 판정단 ④는 “장교제도가 있지만 대다수가 사병 복무를 택하는 건 장교의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며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우려하는 것처럼 신청자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과 비슷하데 죽어도 백신은 맞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주사를 강요할 순 없는 일 아닌가?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고 이 사회가 얻는 실익은 사실상 없다.”〈판정단 ③〉

이에 대해 판정단 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95% 이상은 특정 종교인”이라며 “그 신념을 인정해 주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비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정단 ⑨는 “종교를 너머 성소수자의 복무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인권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최종 투표가 시작됐다. 허용을 택했던 판정단 ①이 입장을 바꾸면서 결과는 허용 4, 불허 5로 역전됐다. 그의 공감을 끌어낸 건 판정단 ⑦의 이 한마디였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땐 목표만큼 타이밍도 중요하다. 국가 안보가 백척간두인 이 시점에 대체복무를 논의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짊어져야 할 청년들은 상당한 혼란을 느낄 것이다. 양심의 자유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되새기는 게 먼저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학회동정

1. 경제사학회

<2017년 연말학술대회>
-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2-6시
-장소: 이화여대 신세계관 313호

2. 국제개발협력학회

<2017년 동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2월 8일(금) 08:30-18:30
-장소: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새천년관
-주제: 한국 SDGs 이행 되돌아 보기

3. 대한지리학회

<2017 지리학대회>
-일시: 2017년 11월 18일(토)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주제: 포용의 지리학

4. 한국경영학회

<2017 CSV 소사이어티 세미나 및 CSV 대상 시상식>
-일시: 2017년 11월 16일(목) 14:00~19:30
-장소: 시청 더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주제: CSV와 혁신성장

5. 한국경제학회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시: 2018년 2월 1일(목)~2일(금)
-장소: 강원대학교(춘천)

6. 한국교육학회

<2018년 연차학술대회>
-일시: 2018년 6월 22일(금)~23(토)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년 연례학술대회>
-일시: 2017년 12월 8일(금)~9(토)
-장소: 한양대학교
-주제: 신국제질서의 모색과 한국

8. 한국문화인류학회

<2017 가을 국제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20일(금) - 21일(토)
-장소: 제주 한화리조트
-주제: 인간의 조건을 다시 묻다: 기술, 환경, 문화

9.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27일(금)~28일(토)
-장소: 서울대학교

10. 한국사회학회

<2017 정기사회학대회>
-일시: 2017년 12월 14일~16일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101동),
사회과학대학(16동),
신양정보학술관Ⅲ(16-1동)
-주제: 사회학적 상상력과 희망의 재구성

11. 한국심리학회

<제 2차 Doctoral Colloquium>
-일시: 2018년 2월 8일(장소: 미정)
-주제: 박사과정 학생들의 우수논문 발표

12. 한국언론학회

<2017 추계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장소: 중앙대학교
-주제: 언론의 공공가치와 디지털 민주주의

13. 한국여성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1월 18일(토) 09:30-18:20
-장소: 한양여자대학교 정보문화관 7층
대강당 및 교수회관
-주제: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 자아,
운동, 새로운 정치

14. 한국정치학회

<2017 연례학술회의>
-일시: 2017년 12월 1(금)~2(토)
-장소: 국립외교원
-주제: 위기와 기회의 한국정치와 국제질서

15. 한국행정학회

<2017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12월 8일(금)~9일(토)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제: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국정운영

협의회 행사

01 협의회 회의

정기 총회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 17:00~20:00

-장소 : 고려대 LG-POSCO 경영관 6층 쿠크홀

02 포럼

-일시: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6시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더라운지 머레이홀

-주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와 현실

-발표자: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03 심포지움

-일시 :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14:00~20:00

-장소 :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2층 207호 & 쿠크홀

-주제 : '포용적 성장의 이론과 실제'

04 정책토론회

	주제	비고
6월 9일 (금)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하나?	6월 29일 게재
7월 14일 (금)	외고, 자사고 폐지해야 하나?	8월 2일 게재
8월 11일 (금)	탈원전 맞는 길인가?	8월 28일 게재
9월 8일 (금)	행정고시폐지 옳은가?	9월 27일 게재
10월 13일 (금)	병역 대체복무 옳은가?	11월 7일 게재
11월 10일 (금)	정부, 블라인드 채용 옳은 가?	12월 4일 게재

05 기타 소식

산동대학교 김국화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박광해 교수님의 번역으로 세종연구소 강명세 교수님의 논문 (제목 : "政治经济学视角下的贫困现象 : 相对贫困的决定因素")이 중국 학술지 <국외사회과학> 2017년 제6기 (110 - 1117쪽) 에 번역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한국사회과학의 연구 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협의회 임원진

회장단

	성명	소속	비고
회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전) 한국인사조직학회(14대)
부회장	강선보	고려대 교육학	(현)한국교육학회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현)한국심리학회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 영상 광고 홍보학부	(전)한국언론학회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	차기 회장 (전) 한국정치학회(2011년)
	한인구	KAIST 경영공학	(현)한국경영학회
감사	김지수	영남대 경영학	
	손승영	동덕여대 여성학	

이사회

성명	소속
백완기	고려대 행정학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
원우현	고려대 언론학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
정용덕	서울대 행정학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
차재호	서울대 심리학
한상복	서울대 인류학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

집행위원회

분과	성명	소속	비고
연구	한준	연세대 사회학	위원장
	김옥태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김주현	충남대 사회학	
	배영	승실대 정보사회학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육학	
편집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위원장
	김치욱	울산대 국제관계학	
	손원숙	경북대 교육학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부	
	정재용	카이스트 경영학부	
	각 학회 편집위원장		
대외협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위원장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	
	정완교	한림대 경영학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하세헌	경북대 정치외교학	
	허경선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사무국	박찬수	고려대 경영학	국장
	전성희		간사

운영협의위원회

학회	성명	소속
경제사학회	김호범	부산대 경제학부
국제개발협력학회	이희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대한지리학회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
한국경영학회	한인구	KAIST 경영공학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한국교육학회	강선보	고려대 교육학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유은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한국문화인류학회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
한국사회학회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
한국심리학회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한국언론학회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한국여성학회	이소희	한양여자대학 실무영어과
한국정치학회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한국행정학회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KOSSREC**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인 _ 이진규

발행처 _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발행일 _ 2017년 12월

(사)한국사회과학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03028

T. 02-735-2159 F. 02-737-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 Inwangsan-ro 1 gil (Sajik-dong), Jongro-ku, Seoul, Korea, 03028

Tel. 82-2-735-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